



# 자율적 시장환경조성, 공정경쟁체제 확립할터

## 집단에너지산업의 향후 정책방향

이재훈 차관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업자간 경쟁체제 구축 및 규제완화정책 등으로 정부의 역할이 자율적 시장환경 조성 및 공정한 감시자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 보급확대 및 규제완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중·단기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

이재훈 산업자원부차관

우리협회는 4월 19일(목) 오전11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집단에너지 산업계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자원부 이재훈 차관을 초청, 최근 한미 FTA 체결 이후 정부의 집단에너지산업 정책방향과 사업전략에 대한 주제로 집단에너지산업 CEO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신임 이재훈 차관과 집단에너지산업 CEO들과의 첫 만남의 자리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집단에너지산업계의 중장기 혁신방안과 기본계획 및 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 추진을 위한 "2007에너지 시장의 환경 변화와 집단에너지산업의 활성화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 강연과 참석 CEO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전례 없이 조석 에너지정책 기획관, 김학도 전력산업팀장, 성시현 에너지관리팀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재훈 차관은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을 통해 국내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집단에너지사업자들에 감사한다'며, '최근 계획 대비 집단에너지 공급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훈 차관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업자간 경쟁체제 구축 및 규제완화정책 등으로 정부의 역할이 자율적 시장환경 조성 및 공정한 감시자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 보급확대 및 규제완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중·단기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 집단에너지 중장기 혁신방안 마련, 적극 추진

집단에너지산업의 향후 정책에 있어서 기본 방향으로는 집단에너지 보급확대 및 규제완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기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추진함에 있다 하겠다.

다시말하면, 집단에너지공급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단에너지 사업 법령 개정을 추진하려 하는 「단기 과제」와 집단에너지 중장기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장기 과제」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단기 과제」로는 첫째,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하였다.

이번 심의진행은 2006년 11월 2일 산자부에서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1월 4일 김성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로써 산자부 제출안을 기본으로 하되 비고시지역 지역난방 공급규정 등 일부 항목을 수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19일 제5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에 있다.

또한,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에 따른 '07년도 신규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는 참여정부 주요 정책과제인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행위의 근거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 작업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99년 이후 유지되어 온, 열요금(고정비) 상한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열요금상한」은 「지역난방 열요금상한 산정기준」에 의거 매년 재고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열요금 인상부담으로 '99년 이후 미조정되었다.

따라서, 현행 기준에 의거 사업자별 원가 계산을 바탕으로한 고정비를 재산정하도록, '07년 연구용역을 거쳐 '08년 관련 고시 및 규정 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고정비 상한의 조정 필요성 및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다.

둘째, '집단에너지 공급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그 추진 배경에 있어서는 집단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향후 5개년간 적용될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 동안의 집단에너지 공급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하며, '07년부터 '11년까지의 보급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정립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함에 있다 하겠다.

(단위: 천호)

년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세대수(증가)	109	122	128	179	125
세대수(누계)	1,575	1,716	1,883	2,115	2,288
보급율(%)	11.2	11.9	12.8	14.1	14.9

상기 표의 주요 내용으로는 '11년까지 '07년 대비 45% 증가한 총 229만호에 공급할 목표로 시장원리에 따른 공정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유도함에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를 종합 검토하여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합리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사업자(장)·지역별 요금차등화 및 지역지정제도의 완화 등을 검토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향후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 상반기내 확정 및 시행될 예정으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다른 기본방향으로는 "집단에너지 중장기 혁신방안을 수립" 하여 추진해 나가는 「중장기 추진 과제」로써 그 추진 배경에는 최근 신규택지개발의 중소기업모화, 민간의 관심 증대 및 적극적인 사업 참여,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산자부 주관으로 집단에너지 및 유관 에너지사업자와 연구원 등의 관련 전문가들로 T/F를 구성('06. 10)하는 등 산업자원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는 집단에너지 확대공급 방안,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 지정제도 개선, 합리적인 사업자 선정방안 마련, 정부규제·지원제도를 시장중심으로 변경하는 방안, 열요금제도 개선 방안, 열생산자간 열거래제도 정립 방안, 집단에너지와 CES사업의 관계 정립 방안, 집단에너지사업의 해외진출 방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역할 재정립 및 민영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